

2005년 11월 25일

보도참고자료

이 자료는 11월 25일 (조)간부터 취급하여
주십시오. 단, 통신/방송/인터넷 매체는
11월 24일 12:00 이후부터 취급가능

제 목 : 북한 금융의 최근 변화와 개혁과제

“붙임”

문의처 : 금융경제연구원 동북아경제연구실 차장 문성민

Tel : (02) 759-5480, Fax : (02) 759-5400, E-mail : smmun@bok.or.kr

공보실 : Tel (02) 759-4015, 4016

“한국은행 보도자료는 인터넷(<http://www.bok.or.kr>)에 수록되어 있습니다.”



한국은행
THE BANK OF KOREA

<붙임>

북한 금융의 최근 변화와 개혁과제

- 1995~2002년 기간중 북한은 경제난에 따른 재정규모 축소로 기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을 사실상 폐지
 - 이에 따라 자금사정이 악화된 기업의 은행대출수요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은행의 대출재원 부족현상 심화
 - 대출수요 증가 등에 대처하기 위해 북한은 1995년경 대출제도를 일부 변경
 - 대출재원 범위에 관한 원칙* 완화
 - : 대출을 늘리기 위해 주민들의 예금으로 제한되어 있던 대출재원의 범위를 확대하여 기업예금 및 예산자금중 인출되지 않고 은행에 일시적으로 남아있는 자금을 대출재원에 포함
 - * 북한의 은행은 대출재원 범위 내에서만 대출실행 가능
 - 대출대상 확대
 - : 정상적인 영업활동에서 자금이 부족한 경우*도 대출대상에 포함시켰으며 이를 위해 계획대부라는 대출과목 신설
 - * 과거에는 국가가 재정자금으로 지원
 - 대출 금리를 예금 금리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

— 실제에 있어서는 재정자금지원의 폐지와 대출대상의 확대로 인해 은행의 대출재원 범위내 대출이라는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대출재원을 초과해서 대출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2002.7월의 임금 및 국정가격 인상 이후에는 그 개연성이 더 큼

○ 또한 북한의 경제상황과 낙후된 금융시스템 등을 감안할 때 은행대출의 상당부분이 부실화되었을 가능성이 큼

□ 재정 및 대출 관련 제도변화로 증가한 은행대출은 현금통화 증가와 시장물가 상승을 초래

— 특히 2002년 7.1조치 이후 대출증가와 이에 따른 현금통화 증가가 시장물가 상승을 주도한 요인중의 하나로 작용

* 쌀(1kg)의 시장가격 : 2002.6월 55원, 2004.9월 1,000원,
2005.5월 1,050원, 2005.10월 750원 내외

○ 7.1조치 이후 기업간 생산수단 거래에서 현금지급을 부분적으로 인정함에 따라 합법적으로 대출자금을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게 되어 은행대출이 시중에 유통되는 현금을 증가시키는데 기여

* 종전에는 대출자금을 무현금으로만 인출(일종의 계좌이체)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며 따라서 대출자금이 시장물가 상승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지 않았음

— 대출자금이 현금으로 인출되어 사용될 가능성이 증대되어 무현금(예금)통화와 현금통화의 구분이 불명확해짐에 따라 현금통화만을 대상으로 하던 통화관리를 무현금(예금)통화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

○ 이는 최근 시장물가가 크게 상승하였을 뿐 아니라 북한이 금년 10월경부터 식량배급 확대를 추진하면서 시장가격 상승에 따른 문제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보임

□ 한편 국가의 재정지원 축소로 기업의 자금부족 현상이 확산되면서 기업간 거래에서도 물품구입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

— 이에 대해 북한 당국은 구매자의 은행잔고를 확인한 후 거래하도록 하는 정도의 미봉책만을 제시

□ 또한 주민들의 예금기피현상과 私金融 확산, 이중환율구조와 외화 선호 확산 등이 지속되고 있으나 예금제도나 환율 및 외화관리 제도의 개선은 대체로 부진

□ 종합적으로 볼 때 북한의 금융환경에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제도개선을 통한 금융기능 향상의 필요성과 가능성이 증대되었음

— 이에 북한 금융당국도 나름대로의 제도변화를 추진해 온 것으로 보임

□ 그러나 그동안 북한이 추진한 금융제도의 변화는 개혁적 성격이 극히 미미한 것으로 평가되며 따라서 금융기능 향상을 위한 제도 개혁 필요

— 예를 들어 은행대출의 증가로 부실대출에 대한 우려가 커져 대출심사기능 확충을 비롯한 대출제도의 정비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유휴자금 흡수를 위해 예금 금리를 인상하는 등 예금에 대한 유인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임